

“전문성 갖춘 재단 훌륭히 이끌 것”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 인사청문회서
도의회, 도덕성·업무능력 검증·사업 추진방안 질의

전북도의회는 3일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전북문화관광 재단은 여전히 신생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재단운영의 전반적 기초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대표이사 후보가 선임돼 재단운영의 안전성에 기여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인사청문위원회(정호순 인사청문위원장)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에서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현황, 납세실적, 부동산 매매 현황을 바탕으로 한 탈세 및 투기 여부는 물론, 주소 이전 현황과 최근 금융거래 현황 및 대출 현황까지 낱말이 파헤쳐져 후보자의 윤리 의식, 공정, 투명 업무등을 판단했다.

오후에는 공개회의로 전환해 후보자의 자질과 재단의 운영방식, 사업 및 조직관리, 윤리적 경영 및 각종 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춘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이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문화관광재단이 기관

의 특성상 문화와 관광 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재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계획을 알아보는 한편, 재단의 독립성을 위한 성공적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기전 후보자는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본인은 예술가이면서 미술단체를 이끌어 간 경험이 다수 있다. 미술관 관장을 맡으면서 각종 미술전시 기획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등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을 훌륭히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순 위원장은 “출범 5년차를 맞는 재단이 아직까지 기관 운영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은 매우 의미 있는 후보자 검증 기회로 평가한다”면서 “청문을 통해 소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위원간 논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 결과는 5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의 검토를 거쳐 8일까지 의장이 도지사에게 청문 결과를 송부하면 마무리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기전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3일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기전 후보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의 脫보수, 8년 전

한나라당 시절 내홍 데자뷔?

미래통합당의 개혁 고삐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탈(脫)보수’를 쇄신의 척도로 내세우자 몇몇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마치 8년 전 한나라당 시절 보수 이념 논란으로 내용을 겪은 데자뷔를 연상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보수라는 이야기를 하면 젊은 층은 ‘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강정책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당시 정강정책의 전문 첫 머리에 규정된 한나라당 노선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보수 탈색 점진적 진행 당 내에서도 불만 ‘표출’

한나라당 비대위 정강정책개정소위는 이런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빼고 공정경쟁, 공정시장, 분배정의 등을 강조하는 정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으나 때 아닌 이념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 내홍만 격화됐다.

당시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을 겨냥해 “뽕 보따리장수들이 들어와서 주인들을 다 휘젓고 다니느냐”고 비판했고, 친박 최경환 의원이 “한나라당은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고 보수의 가치를 보고 모인 당원들도 많은 만큼 당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편에 섰다. 결국 한나라당 비대위는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삭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수습했다.

김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수장에 올라 쇄신의 고삐를 쥐고 ‘보수 지우기’에 나서자 당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잡음이 새어나온다.

통합당을 보수 본색에서 보수 탈색으로 바꾸려는 김 위원장의 시도는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취임 전 지난달 27일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에서 “보수라는 말 쓰지 마라. 자유우파라는 말도 쓰지 마라”고 말한 데 이어 취임 당

일인 지난 1일에는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진보를 능가하는 진취정당을 화두로 던져 과감한 개혁을 예고했다.

3일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도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정치의 기본적 목표”, “실질적 자유를 담기 어렵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 등을 언급하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실질적·물질적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종인표 ‘기본소득제’ 발표가 임박해지자 일종의 군불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김 위원장의 보수 탈색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자 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3선 장재원 의원은 ‘보수 금기령’을 내린 김종인 비대위를 향해 “개혁보수”라는 말도 쓰면 안되는 건가? 심지어 당 내에서 ‘보수’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가치”라는 말도 나온다. 보수의 가치마저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수라는 단어가 화풀이 해서는 안 될 것”, “보수를 없애기 위해 개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에 썼다.

이튿날인 3일에도 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독선적 리더십과 비민주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분간 ‘탈보수’를 놓고 당내 분란이 가열될 순 있지만 8년 전과 같이 김 위원장에 맞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친박계가 이번 총선에서 지리멸렬해 조직이 와해됐고, 당내 의원 중 보수적인 영남권 출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초선들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호의적인 편이다. 다선 의원 상당수는 김 위원장에 대한 뚜렷한 찬반 입장 대신 대부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8년 전처럼 통합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맞서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시스

비안도 해안산책로 데크 파손 민원 현장서 의견 청취

나기학 도의원, 발로 뛰는 의정활동 돋보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더불어민주당 군산1)의원이 관내 민원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통한 현장의정활동을 했다.



나기학 의원은 지난 2일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 등과 함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를 방문, 비안

도 어항 내 도교 교체와 해안산책로 데크 파손 등과 관련된 민원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나 의원과 공무원들은 △비안도에서 어항 내 부잔교와 연결된 도교(20m)가 노후화되고 목재바닥판 탈락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 △비안도 몽돌해수욕장 내 해안산책로 데크가 파손되어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사항 △비안도 여객선 항로 지정 및 운항건의 사항 등의 요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기존 시설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이며, 이용자의 불편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특색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육지와의 교통이 불편한 생활을 잘 견뎌준 비안도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비안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활기찬 어촌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5·18 왜곡처벌 진상규명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서 5·18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이 두 가지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이 되는 절차”라고 부연했다.

송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전하며 “이해찬 대표가 5·18 광주 현장최고위에서 5월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5·18 왜곡 처벌법은 20대 국회 때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했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영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